

# “기상이변에 물가 오를 수도… 일자리예산 4.6조 신속집행”

**최상목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내달 이후 농산물 수급 개선될 것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 방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원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불안이 다시 대두될 조짐이 생겨났다. 이달 쏟아진 호우 여파로 채솟값이 강세를 보이는 데다, 정부 역시 기상이변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다”며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긴 바 있다. 올해 2분기 이후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최근 집중호우 탓에 채소와 과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가격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채소를 고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119.19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동향 및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 민생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전 부처가 세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지원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한

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 원을 신속 집행했다”며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 나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대국민 체험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고령화에 따라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보증금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인구 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하는 등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슈퍼엔저 끝물?’서 계속

## 농심 ‘글로벌 농부’로… 사우디에 ‘K스마트팜’ 구축

농식품부 스마트팜 수출사업 선정  
중소기업 3곳과 컨소시엄 구성  
내년 말까지 4000㎡ 시설 구축

농심이 중동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술력을 선보인다.

농심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사우디아라비아 시범온실 조성 및 운영)’에 선정, 전날 농심 본사에서 협약식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구축 및 운영해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중동 현지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심은 지난 1995년 강원도 평창에 감자연구소를 설립하며 스마트팜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농심은 스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종서를 생산, 보급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후 2008년 안양공장 내 수직농장을 만들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2018년 사내 스타트업팀을 구성



지난 22일, 농심 본사에서 농심을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기업 4개사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 협약식이 열렸다. (오른쪽부터) 에스팜 강성민 대표, 농심 이병학 대표이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호근 원장, 아이오크롭스 조진형 대표, 포미트 강기수 대표가 촬영하고 있다. /농심

하고 60평의 특수작물 연구를 위한 재배시설과 200평의 양산형 모델 스마트팜을 신설했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농심은 2022년 11월에는 오만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처음으로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을 내디뎠고, 이후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스마트팜 수출 MOU를 맺었다.

농심은 이번 중동 스마트팜 사업을

중소기업 3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컨소시엄은 시설구축과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농심과 함께 온실 운영과 작물 재배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에스팜’, 스마트팜 관리 AI로봇 기업 ‘아이오크롭스’, 스마트팜 플랜트 정보기술기업 ‘포미트’로 구성됐다. 농심은 2025년 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역 약 4000㎡ 부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을 맡게 된다.

스마트팜은 최근 중동지역에서도 도입 니즈가 큰 ‘수직농장’과 ‘유리온실’ 복합 모델로 구성한다. 수직농장에서는 프리드아이스, 케일과 같은 엽채류, 유리온실에서는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게 된다. 단맛을 선호하는 중동인들의 입맛에 맞춰 쓴맛이 덜한 엽채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과채류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한다.

농심이 생산한 작물은 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의 기존 유통망을 통해 우선 판매하고, 향후 현지 유통매장인 까르푸, 루루 하이퍼마켓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눈(Noon) 등에도 입점할 계획이다.

농심은 이번 사업으로 중동 현지에서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현지 맞춤형 스마트팜 패키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작물 연구와 가공, 유통판매 등 스마트팜 연관 산업을 모은 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 진출의 교두보 삼을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 “日, 엔화추세 전환 위해 5조엔 이상 자금 투입 직·간접 외환시장 개입”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양적 완화를 동반한 달러 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임기 도중인 2020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의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0% 대로 낮추고 국채를 대규모 매입하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지지율이 떨어졌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엔화 가치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윤정 교보증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낮은 엔화 가치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 재무성이 엔화 추세 전환을 위해 5조엔 이상의 자금을 투입함이 알려지는 등 직·간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엔화 움직임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엔화 강세를 한시적인 이슈로 여길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엔저에 대한 정부 스탠스 전환, 내수 회복 기대, 달러 약세 등으로 절상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산단 임대규제 개선… 입주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산업부, 산업집적법 개정안 의결

산업단지 임대제도가 개선돼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 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